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외부인사 영입 가속도

윤영관·김호기·김민진·백낙청·한완상 등 거론

민주, '安風차단' 로드맵 마련 등 대응카드 부심

무소속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 정치 세력화의 전진 기지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공식 출범시킨데 이어 외부 인사 영입에도 본격 나서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안철수 의원 측의 움직임에 민주당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혁신 드라이브로 안풍(안철수 바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 측이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경제민주화의 기

수'로 불려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과 소장으로 각각 임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각계 인사 영입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내일'은 정책을 주로 다루는 연구소라는 점에서 연구진은 안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 마련을 위해 꾸렸던 정책포럼 멤버들이다가 새로운 인물이 수월되는 방식으로 짜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지난 대선에서 안 의원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한 윤

영관 전 외교부 장관, 정치혁신포럼 대표를 맡았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분야별 포럼 대표를 맡았던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민주화 포럼), 홍종호 서울대 교수(혁신경제포럼), 김형기 경북대 교수(분권혁신포럼) 등의 합류가 점쳐진다.

포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김민진 경희대 교수,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도 연구진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의원측은 또 지난 대선때 문제인 후보의 외곽 지지 조직이었던 '담쟁이포럼'의 대표를 맡았던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져 '내일'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내일'은 단순한 정책연구 기능 뿐만 아니라 신당 창당,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도 하게된다는 점에서 신진 정치세력 및 기성 정치인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본격적인 혁신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안풍(안철수 바람)'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는 당직 인선 등 체제 정비 가 일단락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광주 혁신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새 정치'로 상징되는 정치개혁 여

도 정당개혁 작업을 통해 차별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향식 당 운영을 통해 정국 이슈를 선정하는 한편, 개발하고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는 등 '긴 호흡'으로 당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을(乙)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현정정치와 민생정치에도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결실을 보도록 해 입법 활동에서 안 의원에 대한 비교우위를 각인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재영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스토리가 있는 '정책 스타'를 찾아내 남은 한 자리 지명 최고위원에 임명함으로써 이를 만회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잇단 악재 시름 새누리 지지도 하락 '걱정되네'

새누리당이 잇단 악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6월4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다 각종 악재까지 겹쳐 여론 전반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이전,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의 주민-경찰 충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노사, 환경, 인권, 이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논란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새누리당의 주름을 깊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작성 논란이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이 공개되면서 새누리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관하다는 자세로 일관할 경우 자칫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이는 결국 여론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 현안의 문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나간다면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 정권의 문제는 원칙대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국회 상임위원 보건복지위로 확정 한달만에 배정 마무리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원회로 확정됐다.

23일 배석례 국회 대변인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안 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 희망 의사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안 의원을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지 약 한 달 만에 상임위원을 배정받게 됐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이화영 의원이 안 의원에게 자리를 양보한 뒤, 정무위원회로 옮겨 가기로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의 동의가 이뤄져 해법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가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 결국 국회법에 따라 강 의장의 조정과정을 거쳐 마무리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맺힌 개성공단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촉구대회'를 열어 남북 당국이 공동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창근 비대위 대변인이 이날 행사에서 공단의 발전상을 소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정성호 수석부대표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이명박 前대통령도 조사해야"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정치개입이) 일개 국정원장 차원에서 끝났으리라 보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더 뒷선까지 수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뒷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힌 뒤, "정치개입과 여론 조작의 결과물이 뒷선까지 보고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발본색원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검찰은 지난 대선 때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을 보면 2011년부터 정치개입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한 처벌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철도노조 "KTX 민영화 중단하라"

민주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운영사업자 복수 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나란히 성명을 발표하고 "KTX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이윤석·박수현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22일 성명에서 "말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는 KTX 민영화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마다 별도의 철도 운영회사를 설립해 정부와 철도공사가 51%의 지분

을 갖고 나머지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 보유 지분 20% 정도를 매각하면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어 사실상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조도 같은 날 별도의 성명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철도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일방통행을 계속하면 실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주여성 아이 낳으면 국적 취득"

인재근 의원 국적법 개정 발의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한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를 키우지 않

더라도,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결혼한 이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해 있는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금형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 무관
CNC M/C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 관련부문 자격증소지자 우대
CNC 방전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와이어커팅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사출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3차원 측정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식당/청소	0명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간 : 총원시 까지
● 급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1 통
2) 사진..... 2 매
3) 주민등록등본..... 1 통
4) 건강진단서..... 1 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ull@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담. 나대지
-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 부동산 취득자금
- ▶ 사업자금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임대

주인 임대함

010-4667-9300

목포. 2호 광장 코너

- 구, 맹수 한의원 건물(용당동 1056-5)
- 각층 100평, 1~5층 상가, 6층 고급주택
- 1층 - 아웃도어 매장확정
- 2층 - 한의원 확정
- 3층 -
- 4층 - 보험회사 확정
- 5층 -
- 6층 -